



즉시 배포용: 2023년 9월 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강력한 뉴욕주 총기 안전법 시행 1주년 기념

주지사는 *미 대법원의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Inc. 대 Bruen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를 특별 소집*

뉴욕주는 모든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식적인 총기 안전법 시행 주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총기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총기 안전 확보와 총기 폭력 대응의 전국적 모델을 마련한 상식적 입법 일주년을 기념했습니다. 2022년 9월 1일 발효된 법안에 따라 은닉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신원조사 강화, 화기 안전, 실제 훈련 의무화 등을 포함해, 학교, 정부 건물, 병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은닉 소지 허가 소지자도 화기 소지 제한, 3년마다 허가 갱신 및 재인증 의무화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총기 안전 웹사이트](#)를 설치하여 일반 대중, 총기 소유자, 총기 판매자 등에게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지역사회의 총기 폭력 사태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주지사로서 저는 100년 동안 뉴욕주에서 시행된 은닉방지법을 무효화한 대법원(Supreme Court)의 *Bruen* 판결에 대응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 년후, 우리는 총기 폭력에 대응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전국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Steven A. Nigrelli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불필요한 비극을 막고 총기 폭력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씬없이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총기 안전 및 화기 불법 소지 금지, 모든 종류의 총기 폭력 방지는 주 경찰, 사법 집행 파트너 모두의 최우선과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ruen 판결에 대응하여, 주정부는 네 가지 성격 검사, 지난 3년간 과거 및 현재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 목록,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 신청자의 성인 자녀 등 기타 신청자 가정에 거주하는 성인 동거인에 대한 정보 공개, 면허 관리관 또는 지정자의 대면 인터뷰 등 은닉 소지 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강화했습니다. 법에 따라 면허 취득 과정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 이후 총기 은닉 승인을 신청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화기 안전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훈련에는 교실 강의 16 시간, 실제 화기 안전 훈련 2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시, 나소, 서팩,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이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훈련은 면허를 소지한 화기 소유자가 안전하게 화기를 보관 및 소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분쟁 격화, 자살 예방, 무력 사용 등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기타 주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은닉 소지 허가 갱신 및 재인증은 현행 5년 대신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허가 소유자의 온라인 재인증 절차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Hochul 주지사는 또한 2022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반자동 라이플 소지 관련 연령 하한 의무 조항과 신규 허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1세 이상의 성인만이 반자동 라이플 구매 및 소지 전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의무조항은 2022년 5월 버펄로에서 벌어진 인종 관련 대규모 총격 사건에 대응하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경찰과 사법정의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또한 새로운 총기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 페이지를 마련하여 일반 대중, 총기 소유자, 총기 판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신원조사 의무조항 훈련 및 확대과 관련하여 법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인의 민감한 장소에서 피스톨 또한 리볼버의 은닉 소지 제한. 법에 따라 이러한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개인은 민감한 지역에 대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중범죄 처벌 가능.
- 은닉 소지 허가 자격을 상실할 수준의 범죄 전과 또는 법원 명령이 이쓴지 확인하기 위한 허가 소지자 월간 신원조사 의무화.
- 사람이 없는 차량에 보관한 화기에 총탄을 장전하지 않고 화기, 총격 등으로부터 안전하며 눈에 띄지 장소에 보관할 것을 의무화.
- 18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총기 소지 금지자와 화기, 라이플, 샷건을 보관한 집에 동거하는 경우, 안전 보관 의무조항 확대 적용.

또한 2022년 9월 1일부터 화기 딜러 및 총기 판매자는 반드시 전자 기록, 데이터세트, 또는 정보 컬렉션을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화기 관련 모든 거래 시점에 입력되어야 하며, 화기를 수령하거나 화기를 배달받게 되는 사람의 이름, 연령, 직업, 주거지 등의 데이터를 비롯해, 화기의 수, 제조자, 시리얼 번호, 만약 이러한 정보가 없는 경우 식별 가능한 화기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13일부터 뉴욕주 내 화기 및 앤티크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뉴욕주는 총기와 화기 소유권 이전 시 반드시 신원 조사를 실시하며, 각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총기 거래 건당 신원조사 수수료는 9 달러이며, 화기 거래 건당 신원 조사 수수료는 2.50 달러입니다. 해당 자금은 뉴욕주 신원조사 시스템의 운영에 사용됩니다.

총기 폭력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작년 주 전역의 총기 사건은 약 26 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질병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의 총기 사망률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으며, 은닉 소지 금지법의 영향으로 뉴욕은 사람과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상식적 총기 안전법 시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